



세금환급의 경제적 효과

申 龍 相 (研究委員, 3705-6329)

최근 발표된 세금환급 등을 통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선별성(targeted)과 적시성(timely)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혜택이 저소득계층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입법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간의 협조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10.5조원 규모의 세금환급 및 보조금 지급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국제유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과거 2차례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하자 고유가와 경기둔화의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2008년 6월 8일)」을 발표함.
 -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연간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연 6만~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 등임.
 - * 이 중 연 24만원을 환급받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72%, 연간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85%에 해당됨.
 - * 세금환급 재원은 '07년 세계잉여금 잔액(4.9조원)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 예상분(5.2조원) 등을 활용할 예정임.

- 금번 대책은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효과를 제고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 특히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방법은 유류소비가 큰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별적(targeted)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판단됨.
 - 과거 미국이 재정정책수단을 동원한 경기진작대책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시성(timely), 선별성(targeted), 임시성(temporary) 등 3T 원칙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적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한편 금번 대책에는 경기부양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내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번 대책과 같은 대규모 세금환급대책을 시행한 바가 없어 금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2000년대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서 세금환급과 유사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바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과거 미국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이번 세금환급의 경제적 효과는 정책시행의 적시성과 수혜자들의 소비행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과거 미국의 경우 세금환급액의 20~24%만을 소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축(27~37%) 혹은 부채상환(40~49%)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세금환급금에 대한 높은 저축성향으로 세금환급 후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년 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에 충당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해 미국의 세금환급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20% 정도, 장기적으로는 60% 정도가 소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표〉 과거 미국의 세금환급액의 용도별 사용 비중

(단위 : %)

	용도별 사용 비율			
	저축	부채상환	소비	합계
2001년 세금 환급	33.8	44.9	21.3	100.0
2003년 육아비 공제	27.0	49.0	24.0	100.0
2003년 원천징수 유예	36.8	42.5	20.7	100.0
2008년 세금 환급	37.4	40.2	22.4	100.0

주 : 2008년 수치는 미국 전국소매협회(NRF)의 소비자 의향 및 행태조사 결과임.

- 미국의 경우와 같은 세금환급액의 소비활용도를 국내에도 적용하는 경우, 금번 10.5조원 규모의 세금환급 및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으로 2.1~2.5조원 정도가 소비로 연결되어 향후 1년간 0.25%p 정도, 장기적으로는 0.7%p 정도의 GDP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됨.
 - 다만 미국과 국내 소비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이 차이가 있어 그 최종적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기부양효과 차원에서만 본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세금환급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한편 이번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성(timely action)이 매우 중요하므로 후속 조치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간의 협조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과거 재정정책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의 경우, 정책조율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실제 집행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단계에 이루어짐에 따라 경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세금환급의 집행에는 정부와 국회의 조율과 입법과정이 필요하므로 이로 인한 적시성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KIF**